

창조경제 시대의 출연(연)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송주호* · 심용호** · 김서균***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97년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기업의 부도, 직원의 정리해고, 청년 실업률을 가중시켰으나,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IMF 1년 후인 1998년 당시의 IT, 인터넷, 벤처 관련 사업은 적은 매물비용이라는 장점과 함께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묻지마 투자”라고 할 정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았다. 이러한 벤처 붐을 시작으로, 소액 투자로 가능한 신규 창업이 많았고 이들을 대상으로한 소액 투자업종도 많았다.

2013년 현재의 우리나라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함께 노동자 체감 정리해고 수준이 IMF 위기 당시에 육박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비자발적 고용보험 상실자 수 중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퇴직자는 1998년 약 12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06년 약 6만명에서 2011년 약 10만명으로 지속 증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늘어나고 있다(백남주, 2013). 과거 인터넷 붐의 선두주자이자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싸이월드와 국내 포털 3위의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12년 말 경영효율화를 위해 1300여명의 직원 중 300명 가량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PC에서 모바일로의 IT 트렌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석하고 있다(김장환, 2012). 이러한 상황속에 창업환경은 과거 벤처 붐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벤처 붐의 한탕주의와 지나친 투자 열풍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인하여 기업가와 투자자 모두 신중하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벤처 붐 이후의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 또한 지속되지 않아 벤처투자자들은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엔젤투자를 꺼리며, 실패에 대한 회복이 힘든 창업문화가 팽배하여 창업환경은 더욱 열악해진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벤처 생태계의 회복과 정체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의 창업붐 벤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의 벤처 활성화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처럼 현재의 경제침체도 벤처 생태계 복원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과 같은 맥락으로 벤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코스닥 진입 문턱 완화, 엔젤펀드 및 청년창업펀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자영업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실질적인 폐업률이 85%로 단기간의 휴·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청와대의 2011년 3월 “연구원 기술창업 실태 및 애로요인”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과 비교하여 연구원의 기술창업은 성공률이 높고, 연구기관의 보육이 더해질 경우 실패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면 생존기간이 세 배 이상 길어진다고 한다(전자신문, 2011)

이러한 맥락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1년부터 ETRI 보유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원 창업을 장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의 시기를 앞당겨 본 창업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생존률을 높으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 7개로 아직 2년 미만의 초기 단계이다. 하지만 ETRI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원이 창업하더라도 투자

* 송주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기술원, 042-860-6409, juhosong@etri.re.kr
** 심용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기술원, 042-860-4876, yorish@etri.re.kr
*** 김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책임연구원, 042-860-1263, sk-kim@etri.re.kr

를 받기가 쉽지 않다. 벤처캐피탈은 매출이 없는 기업에 좋은 투자조건을 내어줄 리가 없으며, 엔젤투자자는 더더욱 찾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창조경제 시대의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더불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소(출연(연))을 활용한 창업문화 확산과 기술창업 활성화 전략을 고찰하려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문헌조사를 통한 기술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을 도출하고 둘째, 도출된 핵심요인을 통한 ETRI 창업기업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 실무적 차원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국내·외 기술창업 정책 및 사례 연구를 실시, 마지막으로 이를 통한 창조경제 시대에 적합한 출연(연) 주도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II. 본론

1. 기술창업 성공 및 실패 요인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한다(김대호외, 2009). 새로운 기술이 없이 창업하는 일반 창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권미영외(2012)는 기술창업기업을 소수의 인력이 혁신적 기술과 사업 동기를 가지고 설립한 기업으로 연구개발 중심 또는 새로운 기술 지식이나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기업 그리고 신기술·신제품,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 및 성장 목적을 달성하는 기업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기술 기반의 기술창업기업은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술혁신형 산업구조 구축에 적합하며, 고용 창출과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일반 기업에 비해 우수하다(송치승외, 2011). 과거 IMF 외환위기에서 벤처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김대호외 2009). 정부는 이러한 기술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벤처기업확인제도, 이노비즈지정제도를 운영하며, 대상기업 에게는 R&D지원, 신용 및 정책자금 지원, 병역지정업체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의 초기 생존율(창업 첫째 해 40%, 10년 이내 90% 실패)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률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권미영외 2009). 설성수외(2012) 또한 기업의 창업 초기 5년 이내의 생존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이 시기를 죽음의 계곡이라 말하고 있다.

<표 1> 기술창업의 주요 결정요인

저 자	주요 요인
이종민외(2011)	기술의 첨단성, 특허출원수,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R&D전략 수립
강병수(2003)	사업계획, 기업가정신, 기술전문성, 경영능력, 입지
김근영(2004)	인력, 경영역량, 자금(금융), 창업환경 및 인프라, 제도 및 행정절차
김대호(2009)	<부정적 요소> 기술과신, 자금 관리부재, 경영미흡(영업 및 전략판단 미흡), 기업가정신 부재(리더십 부재, 기업사유화 등) <긍정적 요소> CEO의 리더쉽, 사업컨셉, 상품의 독창성, 외부조달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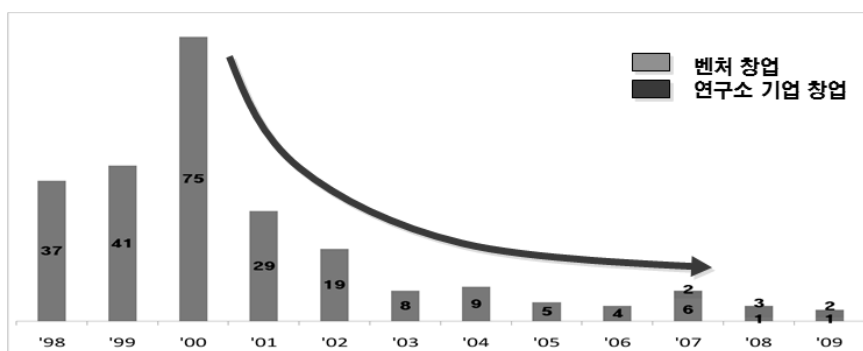
기술창업이 일반창업과 비교하여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히 창업초기 이와 같은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데는 이를 결정하는 주요 핵심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기술창업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문헌조사 결과 관련 연구들의 연구가설 채택에는 각 연구들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었지만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한 기술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은 <표 1>과 같다. 이 핵심 요소들은 기업의 성장단계, 사업분야, 경쟁환경, 시장환경 등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거나 작을 수 있지만 이외의 다른 요소들 보다는 우선으로 고려해야 핵심 요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기업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로는 기업 내부적 차원에서 기업가정신, 경영전략, 인력, 기술요소, 자금관리, 영업력 등이 있었고 외부적 차원에서는 창업 인프라, 제도, 행정절차, 입지 등의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ETRI 기술창업

1) ETRI 예비창업 지원제도



(그림 1) ETRI 창업기업 현황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 문제증가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ETRI 또한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정책 부응하고, (그림 1)과 같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기술창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창업시 겪는 불안과 잠재위험을 경감시키고, 창업 생존률 증대를 목적으로 한 예비창업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출연(연) 최초 예비창업제도를 시행하여 '11년과 '12년에 각각 4명과 3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였다. 2013년 현재 2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연중 상시 모집 체계로 제도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98년 벤처 붐 이후 기업가 정신 쇠퇴와 열악한 창업환경,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창업 이후의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예비창업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TRI 예비창업은 원내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창업자를 선발, 법인설립 전에 연구원의 신분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창업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참여하던 연구과제에서 제외시키고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직접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에 전념 할 수 있게 하며,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도 함께 연계하여 초기 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 정도 규모로 지원한다.

이러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림 2)와 같이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관련 교육,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하며, ETRI 내의 보육시설에 입주하여 다양한 시험·인증 장비 활용, 연구장비 활용을 통한 초기 비용 절감을 꾀한다. 또한 기술이전 기업을 위한 ETRI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창업기술 사업화에 활용가능하다. 창업 후에는 최대 3년까지 무급 휴직을 제공하여 창업 당시의 퇴직과 창업의 갈림길에서의 결정을 3년 뒤로 미룰 수 있다.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예비창업 제도를 통해 '11년과 '12년에 각각 4명과 3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였다. 2013년에도 역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보육 중에 있으며, 창업지원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그림 2) ETRI 예비창업 지원제도

2) ETRI 창업기업 심층 설문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창업 성공 및 실패 요인들을 기반으로 설문항목을 작성하였고, 예비창업 지원제도를 통해 창업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목적은 예비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창업 후 애로사항 파악, 창업자 관점의 지원수요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조사기간은 2013년 1월 24일에서 28일 5일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단답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창업자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

ETRI 예비창업 지원제도 규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80.7점)는 높으나 세부 의견으로 보다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자금과 기간 등이 다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업이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은 초빙된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교육의 횟수 등에 만족하나(84.0점), 이론적 교육보다는 실무와 경험을 중심으로한 교육의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는 초빙된 전문가 중 실제 창업을 통하여 2번의 M&A를 성사시킨 ETRI 출신의 선배 창업자의 교육에 가장 높은 만족도가 나타남에서도 알 수 있었다. 홍보/마케팅 지원에서는 만족도 76점으로 도움이 컸다는 세부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홍보물의 디자인 품질 등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기관을 통한 창업 컨설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기관의 전문성과 멘토의 열정부족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창업 이후의 초기 단계에서의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는 <표 3>와 같으며, 심층 설문조사의 <표 2, 3>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창업지원을 지속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 4>과 같은 개선방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 심층 설문조사 결과(예비창업 지원)

구 분	만족도(100점 만점 환산)
예비창업 지원규모(자금, 기간, 시설 등)	80.7점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외부 전문가 활용)	84.0점
홍보/마케팅 지원(기업과 제품 홍보)	76.0점
창업 컨설팅(전문 멘토를 통한 1:1 멘토링)	75.0점

<표 3> 심층 설문조사 결과(창업이후 지원)

구 분	내 용
자 금	에트리홀딩스(주) ¹⁾ 의 액면가 투자 방식은 창업자의 지분 희석으로 경영의 욕 감퇴, 배수투자 or Buy Back 옵션 ²⁾ 조항 필요
프로젝트 수주	회사 운영자금의 자기자본 조달의 한계와 실적부재로 인한 과제수주의 제한이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ETRI 용역과제 및 공동연구 참여기회 확대
인 력	중·고급 인력 확보를 위하여 ETRI 연구원의 장기 파견, 창업기업 공동의 사무원 활용, 청년인턴 지원 등 필요
기술 및 장비	사업화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확충의 어려움으로 CEO의 경영부담 증대 기술이전시 (자기개발 기술 활용)연구원 출신 창업기업에 우대 조건 적용 연구부서 미활용 및 노후장비 무상 양도
경영지원 관련	창업기업 전담 보육센터 확보를 통한 안정적 창업지원 및 관리비 최소화 창업기업 공신력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및 홍보 지원 보육기간 중 ETRI 자문기관(법률/회계 등)의 무상 활용
인사제도	현행 3년 이내의 휴직기간 연장, ETRI 직원의 창업팀원에 대해서도 휴직확대

<표 4> 창업지원 개선방안

구 분	개선방안
자 금	2013년 예비창업은 전년 대비 1개월과 1천만원 지원 확대 창업 후 자금조달을 위해 에트리홀딩스(주)의 투자규모(소액가능) 관련 규정 개정, 배수투자 or Buy Back 옵션 기반 액면가 투자 검토 기술보증기금과 투·용자 연계 자금지원 활성화(2012년 MOU 체결)
프로젝트 수주	기술을 이전하는 연구부서와 협의, 용역과제 및 공동연구 참여 기회 확대
인 력	ETRI 상용화현장지원제도 ³⁾ 를 통해 정규직원 파견 확대 지원 협의 기술인재지원사업 ⁴⁾ 을 통해 창업기업에 중·고급인력 채용기회 확대 협의 창업기업 경영지원을 위해 전담 사무원 활용 검토
기술 및 장비	기술사업화 등 인력 확보 지원을 통한 CEO의 경영 집중 가능 창업기업 기술이전 우대조건 협의, 미활용/노후 장비 무상 양도 협의
경영지원 관련	홍보용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 제작 지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창업보육공간 확보 및 관리비 감면 협의 수요조사를 통한 법률/회계 자문 및 창업기업 컨설팅 추진 중
인사제도	현행 휴직기간(3년) 연장 및 청년인턴 지원을 위해 인사팀과의 제도개선 협의

대기업의 사내벤처제도와 같이 전사적인 지원, 전략적 투자가 힘든 것이 정부출연기관으로서의 한계이긴 하지만, ETRI는 출연(연)중 유일하게 2010년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인 에트리홀딩스(주)를 보유하여 기술과 현금의 출자가 모두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개 정부출

1) ETRI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2) 매도자가 향후 특정 조건으로 되살 수 있는 계약조건
3) ETRI의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에 사업화 기술개발을 위한 ETRI 연구원 파견
4) 중·고급 기술인력을 출연(연)에서 선발하여 지원, 인건비 50%만 기업부담

연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ETRI는 예 비창업제도와 더불어 이 미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해 놓은 셈이다.

3. 기술창업 국내외 정책 현황

1) 국내외 기술창업 지원정책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창업지원을 통해 자금지원에서 보육,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여기에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의 다양한 연령대별,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분야별 특화된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이외에도 지자체에서의 자체 창업지원을 하고있어 중복지원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STEPI 2012). 기술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특화된 혁신형 중소기업제도인 벤처 및 이노비즈, 경영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같은 인증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자금, 인력, 판로 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김세중, 2013).

이러한 창업지원은 <표 5>와 같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한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쿨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전반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내 예산을 확보하여 창업교육센터를 61개교에 설치하는 등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 기술창업지원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합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간이 조성한 펀드에 매칭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대기업인 인텔은 기술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IBM 또한 기술창업기업에 2억달러를 투자한 상태이다. 이처럼 사기업에서의 창업자금, 구글에서의 창업 및 엔지니어링 교육 지원을 통해 창업문화 확산과 기업가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IT강국 이스라엘은 한국과 비슷한 군복무제도가 있는 국가로 군복무기간 중에도 개인의 재능을

<표 5> 국내외 창업지원 정책 비교(STEIP,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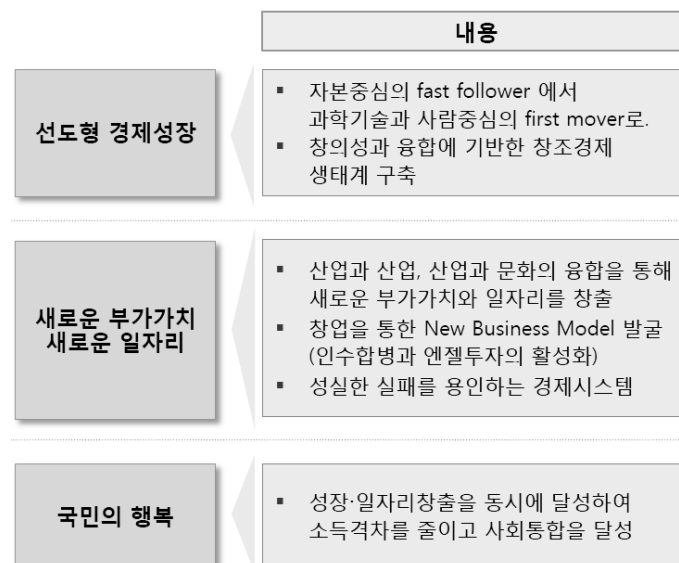
구 분	국 내	국 외
교 육	(교과부) 창업교육센터 61개 대학 설치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18개로 확대 비즈쿨-청소년 대상 창업교육	(미국) 초중고 교사 대상 창업교육 (EU) 리스본 선언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 강조 (영국) 대학의 'Third stream mission' 개념 도입하여 창업 교육 및 실습 지원
창업자금 지원	(중기청) 청년창업자금 1.6조원으로 확대 (금융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범	(미국) 신생기업 금융활성화 입법인 JOBS법을 제정,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크라우드 펀딩 등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이스라엘) 요즈마 벤처펀드 등 조성 (영국) 대학의 창업 지원 펀딩 프로그램 운영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s)
멘토링 및 창업보육	(중기청) 선도기업의 창업기업 보육 지원 (중진공)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기업 멘토링	(미국)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를 통한 무료 멘토링 서비스 (미국) 성공한 대기업과 창업기업의 공조모델 구축(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 프로그램) (핀란드) 1개 벤처기업에 대해 7명의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지원
패자부활	(중기청)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일반보증 적용, 재창업지원자금 제공	(일본) 실패기업인 대상 '제도전 종합지원계획' 마련

발휘하고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젊은 기술자 및 과학자 탄생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을 뜻하는 요즈마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6대4 비율로 일으킨 펀드로 지금까지 40여 개의 벤처기업과 10개의 대형 벤처캐피탈 펀드를 탄생시켰고, 민간에게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민간의 창조성과 자율을 위축시키지 않는 독자적 펀드로 1998년 민영화 되었다. 우리나라도 2005년 모태펀드를 도입하였지만 양질의 벤처 발굴과 벤처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하였다. 실패의 원인은 요즈마 펀드처럼 정부주도로 만들었지만 정부의 개입 없는 민간주도의 형태로 이어가지 못함에 있다.

2) 창조정부의 기술창업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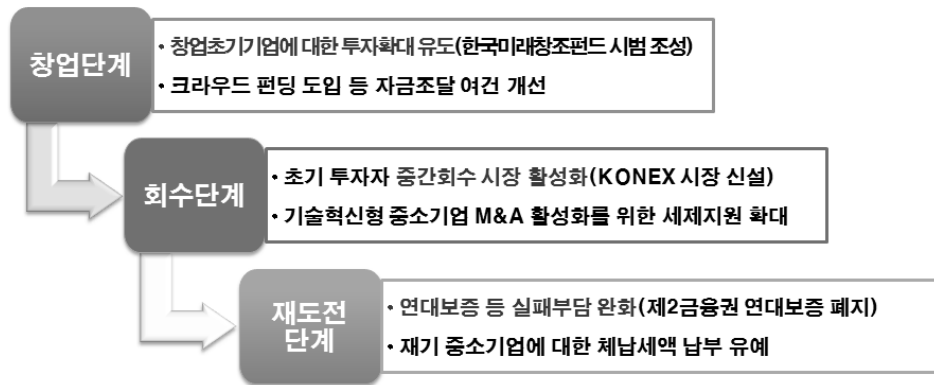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목표로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다. 창조경제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곧 한국경제가 (그림 3)과 같이 ‘일자리 창출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되어 성장 잠재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NIA, 2013; 송중국 2013).

창조경제 구현의 일환인 창업·벤처 활성화를 정책은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한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림 4)와 같이 창업 단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며, 회수단계에서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KONEX 신설을 추진중이다. 또한 실패를 용인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재도전의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그림 3)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송중국, 2013)

공공기관이 보다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는 민간의 모험적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초기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의 규모가 50:50으로 창업자들에게 창업초기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실패의 부담감을 경감시켜 준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가 갖는 의미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기까지의 공백을 엔젤투자자가 채워 끊어진 생태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엔젤투자자들에게는 IPO까지의 약 10년간의 회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 증가시켜줄 수 있다.



(그림 4) 창조정부의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전략

창업자들에게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는 인식을 청산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하여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4. 출연(연)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정부출연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과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학의 연구개발능력이 점차 커져가면서 이들 주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역할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연구소의 통폐합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90년대에 들어 정부출연연구소는 미래지향적 대형첨단기술개발 사업에 주력하는 것을 임무로 현재까지도 국가의 전체적인 연구개발체제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이미 정부의 몫을 넘어섰지만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99.9%이다. 이중 중기업 3.8%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은 중소기업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2). 이를 통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중소기업의 역량이 그만큼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연(연)은 미래지향적 기술개발과 함께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연(연)의 임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지만 그 중요성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창조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곧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사회에 기여라 할 수 있다. 출연(연)의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을 통한 산출물을 기반으로 기술의 사업화가 이어진다면 이것이 곧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은 첫째, ETRI와 같은 독자적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유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화 지원에 나서야 한다. 개발자 출신 연구원의 예비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이 전료를 매출발생 시점까지 유예시켜 위축된 창업 의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한 연구소 기술료 수입의 일부를 창업지원을 위한 별도재원으로 마련하여 점차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충분한 재원과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시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외부인에 대한 창업 지원, 보육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창업문화 확산, 벤처생태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창업자의 경영 미흡으로 인한 사업 실패를 방지하고 개발된 기술의 민첩한 사업화를 위해 기술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업가 정신이 함양된 연구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연(연)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함양 교육의 목적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창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라 한다면, 이 또한, 연구자들에게도 필수적인 소양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출연(연) 통합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출연(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출연(연)은 PBS구조상 이를 위한 재정보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통합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출연(연)과 매칭 투자를 통한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중간회수시장 활성화까지의 엔젤투자 유치에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지원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연(연) 통합 기술지주회사는 창업펀드를 통한 자금투자와 함께 자체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멘토링, 창업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투자와 보육에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에는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공통 인프라(회계/법률자문, 경영지원 등)를 구축하여 초기 비용 절감을 꾀하고 창업자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된 후에는 민간의 펀드를 매칭하여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처럼 초기에는 정부에서 민간의 투자위험을 일부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여 창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독자적 펀드로 민영화 시켜야 한다.

III. 결론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존의 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조정부 또한 창조경제론을 큰 틀로 IC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패자 부활이 가능하고, 엔젤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 하고,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투자확대를 통한 벤처생태계 조성은 침체된 창업 시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다. 이러한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창업 문화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질 것이다.

이에 출연(연)도 창업 활성화 기반구축에 동참하여 벤처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앞서 제시 출연(연)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기업가 정신 함양, 출연(연) 통합 창업펀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걸림돌의 제거는 물론 재원의 조달, 정부부처와 출연(연)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제 ICT전담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워지고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장과 일자리 창출임에 앞으로 출연(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리라 생각하며, 위와 같은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도 실현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였으며, 실증에 대한 자료의 수가 적고 ETRI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출연(연) 중 유일하게 ETRI에만 예비창업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더 많은 창업기업을 보육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기술창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미영, 정해주 (2012), “기업가, 기술 및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권 1호
- 관계부처합동 (2013)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 2013.03.28.
- 김근영 (2004),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2004.12.)
- 김대호, 김홍 (2009), “기술창업 장애요인 실태조사”, 벤처창업연구 4권 1호
- 김세중 (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혁신주도형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STEPI 358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발표자료(2013.03.29.)
- 백남주 (2013), “높아지는 구조조정 파고 IMF 시기에 ‘육박’“, 오마이뉴스(2013.03.20.)

설성수, 오세경, 박현우 (2012), “기술가치평가론”, 법문사

송종국 (2013), “창조경제와 혁신정책(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STEPI, 2013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전략 심포지엄 발표자료, 2013.04.12.

송치승, 노용환 (2011),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미시적 특성과 생존요인 분석”,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4권 3호

이규창 (2012), “SK컴즈, 구조조정 칼바람 직원 3분의 1 감축”, 머니투데이방송(2012.11.02.)

이종민, 정선양 (2011),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R&D 기획역량 혁신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 학술대회

전자신문 (2011), “[스타트업이 희망이다]창업동아리를 주목하라”, 전자신문 기획특집(2011.04.19.)

중소기업청 (2012),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2012.09

NIA (2013), “박근혜정부의 ICT정책 분석 및 과제”, 정책연구 2013-01

STEPI (2012),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12-11